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1. 28(목)	
		작 성 · 문 의	사회조정실 교육정책과 과장 김주연 / 서기관 한레지나 (Tel. 044-200-2323)
엠바고	15:30 (행사종료) 이후 사용		

“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”

- 황교안 총리, “누리과정 예산 일부만 편성 등은 눈가림에 불과”
- 육아 전문가, 어린이집 관계자, 학부모, 보육교사 등과 가진 간담회서 강조

- ▶ “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중앙정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많은 혈세를 거둬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”
- ▶ “지방교육재정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할 곳에 써야하며, 누리과정이야말로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책정해야할 예산”
- ▶ “의무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써야할 곳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행정인지 되묻고 싶다”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1월 28일(목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‘총리-부총리 협의회’에서 누리과정은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수년간 문제없이 집행되어 온 사안으로,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.

○ 이어서 황 총리는 오후에 종로구 생명숲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관계자, 학부모, 유아교육·보육·교육재정 전문가 등과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다.

* 육아정책 전문가 2명, 어린이집 단체 관계자 3명, 학부모 3명, 보육교사 3명을 비롯해 복지부 차관, 교육부 관계자 등 참석

- 이번 현장 간담회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는 시·도교육감과 시·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법령상 의무인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즉시 편성하여 현장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.
- 황 총리는 “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중앙정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많은 혈세를 거둬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”면서, “지방교육재정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할 곳에 써야하며, 누리과정이야말로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책정해야할 예산”이라고 강조했다.
- 황 총리는 의무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써야할 곳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행정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
- 황 총리는 지난 22일(금)에 경기도 소재 유치원을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면서 시도교육감과 시도의회에 조속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하였으나,
 - 아직도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보육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.

< 붙임 :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황교안 국무총리의 모두말씀 >

-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가 법적의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,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
-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,
 -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당시 시도교육감들도 찬성했던 사안임
 - 이러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재량이 아니라 유아교육법령,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엄연한 법령상의 의무지출경비임
 - 그럼에도 일부 교육감들이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, 자신들의 공약에는 1.6조원을 편성하고 있는데, 이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외면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임
- 교육부는 작년 10월에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시도교육청별로 전액을 교부한 바 있음
 - 또한,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세수여건 개선으로 전년대비 1조 8천억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 - 그리고 지자체 전입금도 시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10.1조원보다 1.2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 - 이것만으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57% 가량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임

- 더욱이 최근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의 예산상황을 점검해본 결과, 낭비요소 등을 절감하면 누리과정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 - 시도교육청은 1,500억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, 매년 5천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불용처리하고 있는 실정임
 - 이러한 상황에서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은 몇 개월분조차 편성하지 않으면서 모든 문제를 중앙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음
 - 이는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볼모로 하여 정치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달리 볼 수가 없음

-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그간 문제없이 편성해오던 유치원 예산까지도 삭감하고, 최근에는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만을 편성하거나,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을 편성하려 하고 있음
 - 그러나 이는 한 순간을 피하려는 '눈가림'에 불과한 것임

- 중앙정부 예산은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 것임
 - 중앙정부가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비 전액을 이미 교부했으므로 지방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예산에서 누리과정 경비를 써야함
 - 그럼에도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중앙정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,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혈세를 거둬들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음
 - 지방교육재정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써야하며, 누리과정이야 말로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책정해야할 예산임

- 의무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써야할 곳에는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행정인지 되묻고 싶음
- 정부는 연례행사처럼 매년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켜만 볼 수 없으며,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, 반드시 해결할 것임
 -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교육청에는 우선적으로 목적예비비 3,000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임
 - 또한, 정부는 누리과정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임
 - 그리고, 일부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 실태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드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겠음
- 자식의 미래만을 걱정하며 살아오신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끼쳐드리고
 - 소중한 우리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
-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는 유아교육법령,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
-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현장관계자와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